

공무원연금공단 광주이전... 전북 '반발'

전북지부 4월부터 통합... 광주·전북지부 광주시 운영 전북에향본부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후 퇴행적 조치"

공무원연금공단이 전북지사와 광주지사를 통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전북도와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공무원연금공단은 전북지사를 광주·전남지사와 통합 운영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안도 나왔다. 광주지부와 전북지부를 통합해 광주에 광주·전북지부로 오는 4월부터 통합운영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근거로 공무원 연금공단은 업무환경의 변화와 소규모 지부운영의 한계로 들고 있다.

먼저 인터넷·모바일 서비스 확대 등 비대면 서비스의 증가로 직원들의 직접처리가 필요한 업무가 감소했다는 것이다. 특히 반드시 방문이 필요한 청구나 민원이 극히 적고 방문민원인도 소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인력관리도 소수 근무로 인해 업무대행자가 부재하고 인사이동시 업무가 단절돼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발생한다는 점도 꼽았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공공기관혁신 가이드라인(조직·인력 효율화)에 따라 구성원이 적은 단위조직은 대부분으로 전환, 관리체계를 광역화하겠다는

정책을 이번 개편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다.

공무원연금공단관계자는 "현재 각 지역지부를 정리하고 광역화로 추진하는 개편안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북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특별자치도가 출범했음에도 광주·전남에 또 다시 예측시키려는 시도가 생기면서 전북의 독자권역화를 인정하지 않는 퇴행적 발상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은 호남이라는 광역적 발생에서 벗어나 독자적 권역을 형성했다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전북에향본부 관계자는 "과거 전북은 과거에도 광주·전남에 예측되는 것을 타파하기 위해 발버둥을 쳐왔는데

특별자치도가 출범했음에도 광주·전북 통합운영은 퇴행적 조치"라면서 "전북특별자치도가 출범한 뒤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전북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연금공단의 행위는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무원연금공단의 이번 조치는 납득도 안되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기존 방식대로 전북지사 운영을 존치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주 국회의원(전주병)도 "공무원연금공단 전북지사의 광주 이전은 전북지역 공무원연금 수령자와 연금 납부자를 무시하고 우롱하는 처사"라며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위협하는 잘못된 정책이자 또 다른 전북 홀대"라고 비판했다.

/뉴스스

올해 첫 공공보건의료위원회 개최

전북자치도, 2024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안) 심의

전북특별자치도가 29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2024년 제1회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 시책 및 사업의 조정 등에 대한 심의 역할을 수행한다.

위원회에는 주민대표, 공공보건의료 수요자 대표, 공공보건의료 공공지 대표, 공공보건의료 전문가, 관련 공무원 등 1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4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전북자치도의 보건의료 주요사업 보고를 통해 공공보건의료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전북자치도는 올해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지역 책임의료기관 지정 공모에 참여, 지역 책임의료기관을 1개소 추가 지정하여 3개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 기본계획에 따라 필수로 제공 체계 확충, 공공의료 역량 강화, 공공보건의료 제도 기반 강화 등 3분야 10개 세부추진 과제를 체계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수립한다.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협력체계 구축사업과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업을 보고 받고 전북의 필수로 문제 해결을 위한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지역내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필수 보건의료 서비스의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전북 완결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올해는 소아응급환자가 야간 휴일에도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도록 달빛어린이병원을 확대하고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와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며, 응급의료지단을 설치해 응급의료체계를 종합적으로 컨트롤할 계획이다.

강영석 전북특별자치도 복지여성보건국장장은 "이번 위원회가 공공보건의료정책의 중요한 사항들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부위원장인 유희철 전북대학교병원 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통해 전북자치도에 맞는 공공보건의료정책을 발굴하고 건강 격차 없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자치도, 2024년 봄철 산불예방 대응활동 본격 돌입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 대책본부 운영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7일 '2024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산불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도내 14개 시·군과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예방 및 방지에 앞장선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최근 10년간(2014~2023) 총 274건이 발생해 96.76ha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고, 연평균 27건의 산불이 발생해 평균 9.7ha의 산림이 피해를 본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산불은 이른 봄철에 210건(77%)이 발생했으며 주요 발생 원인으로 입산자 실화가 40%로 1위를 차지했고 그 뒤를 이어 2번째로 많은 산불발생 원인은 소각행위로 24%를 나타내고 있어 산림과 인접지역에서의 화기 취급에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해 도내에서 46건의 산불이 발생해 22.85ha의 산림이 피해를 봤다.

최근 기후적으로 봄철 가뭄과 건조일수의 증가 추세와 집약농업이 넓게 분포하고 있는 도내 산림 구조상 산불에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산림인접지역 내 불법 논·밭두렁 태우기 및 농업부산물 소각행위도 지속되고 있어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업부산물 파쇄·수거사업과 협업체 산불위험요인 사전제거와 불법소각 단속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전북자치도가 도내 14개 시·군과 유관기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산불예방 및 방지에 나선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전북특별자치도는 산불재난으로부터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 원인별 산불예방대책을 강화하고 첨단감시체계 구축과 산불 사전 대응체계 확립과 초동진화체계 구축'을 목표로 예방·감시에측·대비·진화·조사홍보 4대분야에 추진전략을 세우고 성과를 거둘 과제들을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우선, 산불 조심기간인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봄철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도와 시·군 및 읍면동 258개소를 운영하여 산불예방 활동과 초동진화체계를 구축,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에 도에서는 산불발생 시 초등대

응을 위하여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418명을 가동하며, 산불진화를 위한 인차헬기 3대(중형 3대)를 운영해, 익산과 함양에 소재하는 산림청 산림항공관리소(산불진화헬기 8대)와 협력해 산불을 체계적으로 진화할 계획이다.

설연휴(2.9~2.12),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3.15~4.15), 청명·한식, 어린이날, 부처님오신날에는 맞춤형 산불방지 대책을 실시하여 성묘객, 입산자 등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계도 및 불법소각 자동단속을 실시해 산불방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산불예방 및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하는

데 주민들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산림인접지역(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논·밭두렁 태우기 등 모든 소각행위가 금지되어 있어 농업산불은 수고·파쇄 등의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또한, 자발적 소각근절 유도를 위한 '소각산불 없는 녹색마을'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어 마을별로 적극 참여하길 권장한다.

도는 산불발생 시 상황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에게 알리고 산불 초기대응 단계가 지나 확산대응단계(산불피해 면적 10ha 이상)에 접어들면 산불현장 통합지휘본부장이 2시간 이내에 브리핑을 실시하여 산불대응 상황을 주민들과 공유할 예정이다. /김재훈 기자

도내 거주 농가 축산기술 전문교육

전북특별자치도 축산연구소

전북특별자치도 축산연구소(이하 연구소)가 도내 거주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실습 중심의 맞춤형 기술교육을 실시한다.

연구소는 2024년 270명의 축산전문인력 배출을 목표로 청년축산인육성교육, 현장실습교육(WPL), 축산현장기술교육, 축산역량강화교육 등 9개 과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 한우 사양·개량 관련 교육인원을 기수당 20명으로 늘리고 청년축산인 대상 연령도 40세에서 45세로 상향 조정해 교육 수혜 인원을 확대했다.

최근 3년간 교육 이수자가 790명에 달할 만큼 인기인 축산기술 전문교육은 현장실습교육을 제외한 모든 교육이 무상으로 기수당 15~20명의 교육생을 선발해 2월부터 11월까지 운영된다.

올해 교육은 한우 사료관리, 한우 사양관리 입문, 한우 인공수정 1기, 한우 사양관리 심화, 한우 인공수정 2기, 한우 인공수정 3기, 청년축산인 육성교육 1기, 현장실습교육, 젖소 인공수정, 한우 개량, 축산현장기술교육, 한우 인공수정 4기, 청년축산인 육성교육 2기, 한우 인공수정 5기 순으로 운영된다.

이해이 전북특별자치도 축산연구소장은 "축산기술 전문교육을 통해 우리 지역 축산농가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농가 맞춤형 교육 과정을 지속 개발하고 교육 품질 향상에도 꾸준히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교육에 관심있는 축산농가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육 신청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